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0년 12월 24일 (목)

CONTENTS

-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이슈브리프

(IB 2020-16)

CONTENTS

- I.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1
- II.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 14
- III.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 24

발 행 인: 지상욱

편 집 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윤식, 나경태

편집간사: 김진솔

발 행 일: 2020년 12월 24일

발 행 처: 여의도연구원

인 쇄: 디엔시파크

Contents_

금주(12월 4째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일전문인력 양성, 영화업계 지원방안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ESG가 기업경영, 국제무역 등에서 새로운 질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제2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됨에 따라 통일전문인력도 이에 맞게 개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전문인력 양성 로드맵을 구상해봤습니다. 제3편에서는 코로나 19로 존폐위기를 맞은 영화업계의 피해현황을 진단하고, 업계 생존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제1편: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국제 무역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이를 주도하는 미국과 EU 입장에서는 ‘환경정의’라는 명분과 내수 산업 육성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으나, 제조업 중심 수출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음. ESG는 경제뿐 아니라 전 사회분야에 걸쳐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까지 수반하는 개념이라 새로운 차원의 무역장벽이라고 볼 수 있음.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임. 각 기업들이 국제 무역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 개편이 필요함

제2편: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이윤식 정치외교안보실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의 혁명적 진보가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책 요구는 물론, 직무역량 변화와 직업훈련 등 구체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 한편, 한반도 통일이란 민족적 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현 한반도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한 교류협력은 중단된 상태지만, 이런 때일수록 통일에 대한 대비, 구체적으로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 마련이 긴요. 이에 통일부는 각 부처와 협력해 관련 정책연구 및 학술회의를 개최해 통일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아울러 국회도 우리의 숙원인 통일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여야 합의의 특위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해야 함

제3편: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조희문 前 인하대 교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한민국 각계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중에서도 영화업계의 타격이 심각. 영화계는 제작 중단, 개봉 연기, 극장 운영 저조 등으로 업계 조성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 특히, 영화 관객수가 지난해 대비 30% 수준으로 격감한 점은 이번 영화산업 위기의 주요원인이 유통 경색이라는 점을 방증. 그럼에도 정부는 영화업계에 대한 대책 마련은커녕 스스로 생존하라는 식으로 영화업계를 사실상 방치. 이에 다른 위기산업 수준의 지원대책 마련, 특히 영화인, 극장업계 등에 긴급지원 자금 유통에 대한 논의가 필요

I.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작성: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kek@cfe.org)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국제 무역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이를 주도하는 미국과 EU 입장에서는 '환경정의'라는 명분과 내수 산업 육성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으나, 제조업 중심 수출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음. ESG는 경제뿐 아니라 전 사회분야에 걸쳐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까지 수반하는 개념이라 새로운 차원의 무역장벽이라고 볼 수 있음.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임. 각 기업들이 국제 무역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 개편이 필요함

1. ESG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

□ 유평하는 미국의 친환경정책

-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선과정에서 강조해왔던 기후, 친환경 현안이 국제 무역질서의 새로운 규칙으로 등장할 전망
 - 환경 규제를 철폐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의 경우 샌더스 후보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했음
-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은 '환경정의'라는 명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추구

- 바이든 정부는 ‘건전한 자본’ 차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친환경 정책에 큰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의 핵심공약인 ‘클린에너지 경제건설’은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Net Zero가 핵심
-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4년간 2조 달러(2400조원) 이상 투자해 100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

〈표 1-1〉 조 바이든의 주요 친환경 공약

구분	주요 내용
2050 Net Zero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한 법령 제정 ■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R&D에 10년간 총 4,000억 달러 투자 ■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 인센티브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소 추가, 전기차 관련 세제 변경, 주별 친환경 제조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기후변화 국가대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수자원·교통·에너지 인프라 투자, 지역별 기후대응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중국을 넘어서는 고속철도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협정 재가입, 주요국과 감축 합의공개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 탄소감축 양자협정 체결, 중국에 석탄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등
환경양극화 (Climate Gap)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관련 행사 집행 강화를 환경보호청(EPA)과 법무부에 지시, 책임 법인의 대표자 처벌도입 등 환경형사책임 관련 개정 등 ■ 친환경 혁신 정책 수혜를 오염 피해가 심한 지역사회에 우선 배분

□ EU, 빨라지는 탄소중립 시간표

- EU는 2021년 상반기 중 ‘유럽 그린딜(Green Deal) 법안’을 마련할 전망
 - EU는 그린딜을 중심으로 8대 정책분야를 선정하여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
 - 2019년 12월 취임한 EU집행위원장(폰 데어 레이언)은 취임 전부터 기후 변화대응을 우선순위로 강조해왔으며 EU 그린딜 도입의 주역
- EU는 1조 유로 규모의 투자를 통해 그린딜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부양을 위한 성장전략으로 채택할 예정
 -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 및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40%에서 5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해양, 육상, 건축 분야로 확대, 역내 수입품에 탄소 국경 조정세(Carbon Adjustment Mechanism) 도입 예정
 - 자동차 배출규제를 상향하고 플라스틱세 신설 등 환경규제를 강화

〈표 1-2〉 EU, 주요 환경 관련 정책 동향

구분	주요 내용
온실가스 목표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40%→55%) (유럽 기후법 개정) - EU ETS(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개정을 통해 도로 수송, 건물 부문도 대상에 포함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대상 무상할당 배출권 삭감(약 -24%)
탄소국경세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2021년 상반기 도입 검토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회원국간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EU 재생에너지 금융 메커니즘’ 발표 - 자금공여국 투자를 자국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으로 인정 등

□ 중국, 친환경 정책으로 경쟁력·리더십 두 마리 토끼 전략

-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에도 불구하고 협약 준수 및 녹색회복을 주장하는 등 환경 문제를 강조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 UN총회 연설에서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
- 중국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을 보유하여 새로운 무역질서를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임
 - 전세계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의 30%가 중국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2019년 기준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8% 수준임
 - 2019년 중국내 전기차 판매량 120만대로 전세계 판매량의 52.6%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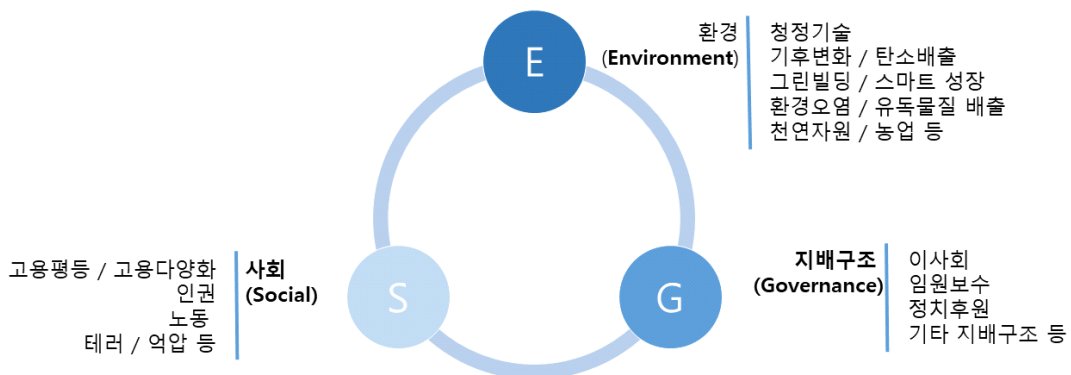
〈표 1-3〉 중국의 주요 친환경 정책 동향

구분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육성 정책으로 ‘중국 제조 2025’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중점 분야로 선정 → 비화석발전 비중 2035년 78%, 2050년 91%로 확대 전망 (태양광/풍력: 2035년 58%, 2050년 73%)
전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차 충전보장능력 행동계획(2018)으로 2019년 전기차 충전 스탠드 큰 폭 증가 (2017년 44만개 → 2019년 122만개)
Great Green W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bon Offsets 일환으로 2050년까지 35백만 헥타르 산림 및 습지 조성
녹색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목표 이행 메커니즘으로 활용 확대 전망

2.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ESG

- 친환경 공약을 앞세운 바이든의 당선과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ESG는 경제계에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음
-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글로벌 차원의 저성장 흐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될 전망
-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회사들은 경제적 암흑기에도 성장,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 해답으로 지목된 것이 ESG 지표들임
-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글로벌 불경기 상황에서도 투자수익을 창출이 가능하려면 환경문제(E)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회적 기여(S)에 충실하며 지배구조(G)가 건전한 기업에 투자, 즉 ESG투자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
- 기업 입장에서 ESG 경영은 단순히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속경영의 필수 조건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추세임

[그림 1-1] ESG 구성 요소



* 자료: 메리츠 증권

- ESG는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 외에도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여 등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 변화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ESG 확산은 민간이 주도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
- RE100 캠페인¹⁾이 대표적인 사례로, 글로벌 시민단체들의 환경 캠페인으로 시작한 구호가 이제 WTO 이상의 무역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Bottom-up 형식의 전개과정은 제레미 하이먼즈가²⁾ 제시한 ‘새로운 권력’이 성공적으로 발현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해석할 수 있음

3. 기업의 생존조건으로 등장한 ESG

- 기업의 경영 및 투자 측면에서 ESG 리스크를 고려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생존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
- 2019년 주주들의 탄소감축 요구를 묵살했던 미국 석유회사 엑손모빌의 경우 80달러 대의 주가가 절반 이하로 폭락, 2020년 8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에서 92년 만에 퇴출됨
- 2020년 9월 개봉한 디즈니 영화 ‘물란’은 엔딩크레딧에 신장 위구르의

1)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친환경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얻겠다는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캠페인. 2014년 국제 비영리 환경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연합하여 개최한 뉴욕기후주간에서 발족됨

2) <뉴파워: 새로운 권력의 탄생>, 제레미 하이먼즈, 비즈니스북스, 2019.

중국 공안에게 촬영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가 강력한 불매운동에 직면한 바 있음

- (주)한화는 민간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무기(분산탄)를 제조한다는 이유로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 연기금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고, 유럽 수출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발생해 결국 2020년 11월 분산탄 사업 분야를 전격 매각하기에 이룸
- 반면, 덴마크의 오스테드는 석유사업에서 친환경 해상풍력 발전회사로 거듭 나면서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하였음

○ 이에 따라 글로벌 각국 정부의 ESG 관련 규제/정책 및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 요구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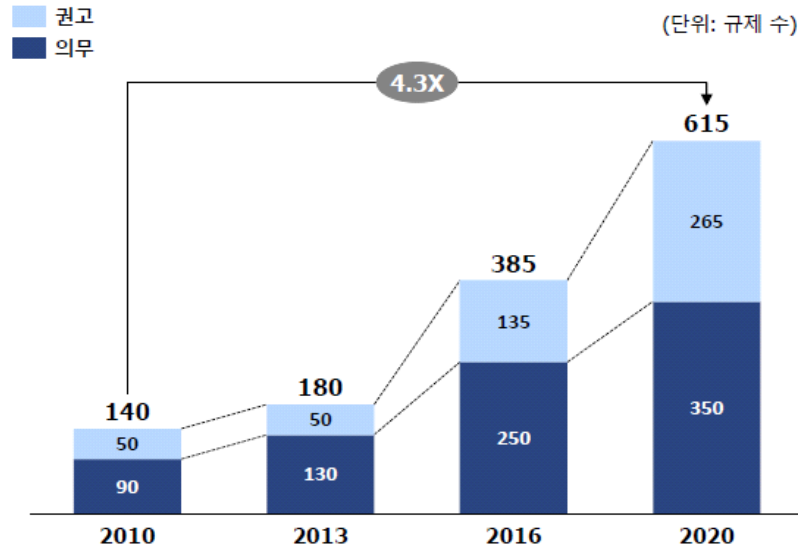
- ESG 관련 각국의 신규규제 및 정책은 최근 6년간 6.5배 증가
- ESG 정보공시 규제 또한 지난 10년간 4배 증가함

〈표 1-4〉 ESG 관련 각국의 신규 규제/정책 도입 사례

구분	주요 내용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금융 Action Plan 제정 ■ 주주권리보호 규제 도입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규제 도입 등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선임시 다양성 고려 권고 ■ 남녀 임금 격차 공시 의무화
중국/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채권 발행 및 검증 가이드라인 도입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및 공급망 내 인권 침해 리스크 관리/실사/공시 의무화

* 자료: MSCI, Who will Regulate ESG?(2020)

[그림 1-2] 정보공시 증가 추이



* 자료: GRI, Carrots and Sticks 2020: 증권거래소, 금융규제기관 등 정부관련 기관 제정 규제

4. 국내 기업의 ESG 경영과 현안

- 환경(E) 분야의 탄소 배출량,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 등은 글로벌 무역 질서의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미국의 탄소조정세³⁾, EU의 탄소국경조정세⁴⁾는 환경 기준을 넘지 못하는 기업에 관세나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것임
- 저탄소 사회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국내 기업의 강점인 원가경쟁력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 고탄소 집약적인 국내 주력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함

3) 바이든 2050 탄소제로 공약: 미국이 요구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의 탄소 관련 상품에 대해 관세 부과

4) EU 탄소국경조정세: 2023년 도입을 추진 중인 새로운 관세 형태임. 자국 수출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다른 나라 수입기업에는 부담금을 추가로 물리는 내용이 골자임

-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고,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는 상황임
 -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을 의미함⁵⁾
 - 2018년 애플,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수출기업에도 납품하는 부품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고 있음
 - BMW는 LG화학과 삼성SDI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전기차 배터리 납품 조건으로 요구하였고, 조건을 맞추지 못한 LG화학은 결국 BMW 납품하지 못했으며, 애플도 SK하이닉스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자사 납품 제품을 사용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함
- 국내 기업들도 환경 이슈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ESG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투자와 생존에 유리하다는 판단하고 있음
 - SK의 RE100 선언은 그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예임
 - SK는 SK,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SK하이닉스 등 8개 계열사가 국내 최초로 RE100위원회에 가입했으며, 수소사업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액화수소 설비를 구축, 공급하는 사업에 뛰어 들었음
 - 삼성그룹도 탈석탄 방침을 확고히 하고, 석탄화력 발전사업에 신규 참여하지 않으며, 기존 사업은 순차적 철수 방침임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 금융 계열사 역시

5) 2020년 12월 현재 278개 글로벌 기업이 가입함

석탄발전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석탄발전소 건설 목적의 회사채 등 직간접적인 투자를 모두 중단하고, 석탄 채굴 및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함

- 한화그룹은 태양광 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화약·방산 산업을 분할해 별도 독립법인으로 만들고 브랜드가치 제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 피할 예정임
- 그 외 DB손해보험, KB금융지주 등 금융권도 '탈석탄 금융'을 추구하며 석탄관련 투자 중단을 선언하는 추세임

○ 한편 국내에서는 기관투자자들 중심으로 책임투자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지배구조(G) 분야에 관심이 높음

-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배구조에 대한 요구가 큼
- 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은 신속한 의사결정, 적절한 투자, 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성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함
- 한편, 가족기업이 ESG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에 비해 비교적 장기적 안목에서 가치경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주목을 받고 있음⁶⁾
 - ESG 경영은 단기적 경영성과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어야 성립 가능함
 - 단기적으로는 매출, 수익 구조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ESG에 충실한 방식으로 기업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안정된 수입구조가 필수적임

6)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2020년 11월 18일 열린 '징벌적 기업 상속세, 타당한가'를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내 3367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가족기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주도하면서 친환경 분야 역량을 강화해 비재무적 가치를 극대화한다고 주장함

- ESG 경영은 보편적, 규범적 적용보다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과 경영 환경에 맞게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임
 -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기업의 영업이익,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서, 모든 기업에게 제도와 규제를 통해 ESG 경영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 주주, 근로자뿐 아니라 우리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 경영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 기업 본연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하여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⁷⁾

5.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ESG 중심의 무역 기조는 수출 중심의 국내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선진국들은 ‘환경 정의’라는 명분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의 기술적·제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자국산업 보호’라는 실익도 얻는 상황임
- 반면, ESG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친환경 무역 기조가 또 하나의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 환경에서 역차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7) 민재형, 김범석, “기업의 ESG 노력은 지속가능경영의 당위적 명제인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른 비재무적 책임향상 노력의 차별적 효과”, 《경영과학》 제36권 제 1호, 2019년 3월, pp.17-35.

- 미국, 중국, EU 등 무역상대국의 ESG 정책들을 분석하고, 우리 산업에 피해가 심각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
 - 환경공시 의무화, 녹색투자 의무화, 탄소배출권 거래 기준 강화와 같은 환경규제의 경우 국내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 경제 차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의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과 목표, 자원 마련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나 정치 이슈에 함몰되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
- 기업들의 RE100 선언에 따른 구체적 실천이 가능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에너지 시장 체계를 개편해야 함
 - 2019년 발전량 비중은 △석탄 40.4%, △원전 25.9%, △LNG 23.3%, △신재생 6.5% 수준으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낮음
 -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없으므로,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에너지 비중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 미국, 영국, 일본도 탄소중립, 낮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고려해 원전 활용을 높이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 기업이 자율적으로 ESG 경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
 - 국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환경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향하며 경영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통상 환경에 대비해 가고 있음
 -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역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II.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작성: 이윤식 정치외교안보실장 (lee.youn.seek@ydi.or.kr)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의 혁명적 진보가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책 요구는 물론, 직무역량 변화와 직업훈련 등 구체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 한편, 한반도 통일이란 민족적 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현 한반도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한 교류협력은 중단된 상태지만, 이런 때일수록 통일에 대한 대비, 구체적으로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 마련이 긴요. 이에 통일부는 각 부처와 협력해 관련 정책연구 및 학술회의를 개최해 통일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아울러 국회도 우리의 숙원인 통일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여야 합의의 특위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해야 함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 2016.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은 4차 산업혁명을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라고 정의
- 원래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독일 「High-tech Strategy 2020」의 10대 프로젝트 중 제조업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는 걸 의미했으나, WEF가 “4차 산업혁명”이라 언급하며 화두로 등장
- 인공지능(AI), 가상현실,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딥러닝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도 지칭

- 즉, 초산업에 걸쳐 각종 자료를 핵심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기존 역량을 연계해 기술진보와 미래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까지 요구
- 4차 혁명이 주도하는 미래사회의 특징은 경제·사회 구조의 융·복합적 변화로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일상화되는 “예측 불허의 세상”
- 지역과 국가를 넘나드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공유경제 같은 효율성 증가란 장점뿐만 아니라, 일상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을 동시에 내재
 - 글로벌화는 새로운 상호의존을 발생시켜 어떤 결정이 개인과 국가 공동체를 넘어 초지구적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영향을 초래
 -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며, 기후변화, 환경오염,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책도 요구
-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특징은 기술진보가 고용시장 및 노동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 지형의 획기적 변화로 이어짐
- AI의 발달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체하고, 현 플랫폼 기반의 기업 운영과 고용 및 공유경제 확산 등으로 기존 노동관계에서도 획기적 변화가 발생
 - 독일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 부문 120,000개(4%), 품질관리 20,000개(8%) 및 유지 부문 10,000개(7%)의 일자리가 감소
 - ※ 미국에서도 기술진보에 따라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의 47%가 컴퓨터로의 대체 확률이 0.7 이상인 고위험군 직종에서 나타남
 - 반면, 긍정적 전망도 있는데, 4차 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예측도 존재

※ GE(2016)는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및 산업로봇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성 높은 분야에서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중 65%가 신생직업이 될 것으로도 전망

〈표 II-1〉 국가별 미래사회 변화 동인

구분	주요 변화 동인
독일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공급망, 자가조직화 기술 등
영국	바이오 및 나노 테크놀로지, 가상현실, 홀로그램, 3D 프린팅 등
미국	클라우드, 자동화기술, 센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3D프린팅,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등
호주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 출처: *Technology,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Work in Europe*(Oxford Univ., 2015).

2. AI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명적 진보가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직무역량 변화와 직업훈련 등 매우 구체적인 영역으로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
- 한반도 통일이란 숙원을 품고 있는 우리로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
 - 물론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간 교류협력은 중단된 상태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통일에 대한 구체적 대비가 더욱 긴급
 - 이에 통일준비는 여러 차원(남북간 역량강화, 국내적 역량강화, 통일 외교 역량강화 등)에서 이뤄져야겠지만, 남북관계 경색 상황에선 ‘국내적 역량강화’와 ‘통일외교 역량강화’에 집중해야 함

- 특히, 상기 3가지 차원 중 국내적 역량강화를 위해선 4가지 부문의 개별 성과 및 부문간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 조화가 필요¹⁾
 - 4가지 부문에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통일비용 및 재정 확보, △법·제도적 기반의 완비, △통일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등
 - 무엇보다 통일은 국민의 열정이 총합 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민족적 과업인 바, 제도통일 및 국가통합 과정을 순조롭게 관리해 나갈 통일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 마련이 필수
- 통일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선 3단계 과정이 조화롭게 선순환 되면서 순차병행되어 나가야 함
 - 첫째, 어느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전문인력 수요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수요 예측과 그를 뒷받침할 “지표화된 매뉴얼 구축”이 필요
 - 둘째, 전문인력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양성·관리할지, 또 기존인력의 활용 및 신규인력의 보완을 위해 어떻게 균형적으로 인원을 조정할지에 대한 “종합적 양성 로드맵”의 제시가 필요
 - 셋째, 이렇게 양성된 전문인력들을 어느 단계에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등의 활용방안을 완비한 접근이 필요
- 그런데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안 어디에도,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의 통일전문인력 수요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예측 조사도 이뤄져 있지 않다는 점
 - 이에 통일전문인력의 수요 예측부터 양성 및 활용에 이르는 전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초 자료를 위한 연구에 착수하는 것이 시급

1) 이윤식, “통일 공론화 사업의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 (통일준비위원회, 2015) 참조.

3. 통일전문인력의 개념 및 유형 구분

- ‘통일에 대비’한다는 건 ‘통일을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현실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남북간, 대내적, 대외적 차원의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을 의미
 - ‘전문인력’이란 “정부가 △통일준비 단계, △통일 직후 단계, △통일 후 통합 단계 등 시기별로 활용할 다양한 분야에서 특성화된 전문인력들의 수요”를 의미
 - 이렇게 볼 때, ‘통일전문인력’이란 “통일 관련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통일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거나 실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총체”를 의미
- 우선, 통일전문인력의 수요를 시기별로 세분화해 보면 크게 3시기(통일 준비기, 통일 직후기, 통일후 통합기)에 인력 소요가 예상²⁾
 - 통일 준비 단계: 현 시점부터 남북이 제도 통일을 이루고 법적으로 단일 국가를 선포하는 직전 단계까지 분야별 소요 예상 인력
 - 통일 직후 단계: 남북이 단일 국가를 선포한 직후,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중대한 현안들을 다룰 인력 소요
 - 통일 후 통합 단계: 통일 이후 사회통합 및 국가 정체성 회복과정에서 분야별로 소요가 예상되는 인력
- 다음, 소요 인력을 기능적으로 분류해 보면, 3가지 정도로 유형화(실무 인력, 핵심 인력, 공공 인력)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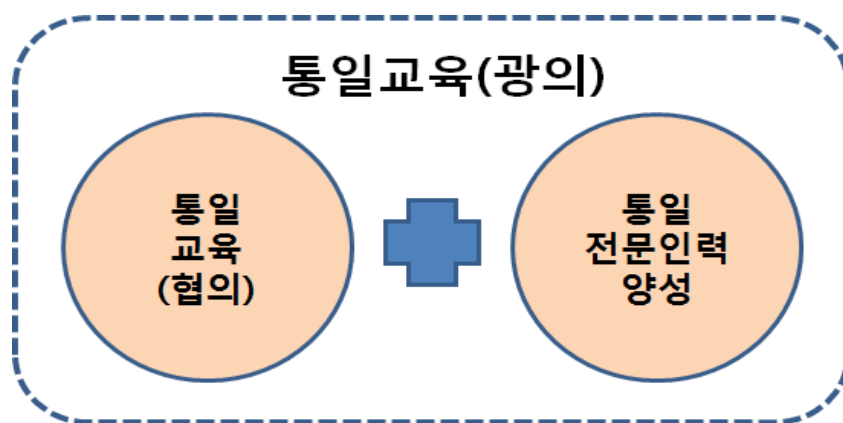
2) 전영선,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통일부, 2015) 참조.

- 현장(실무) 전문인력: 남북교류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서 북한의 새로운 정보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인력
- 핵심(정책) 전문인력: 남북 사이에 진행될 각종 협력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
- 공공 전문인력: 정부 부처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북한 업무 담당자로 각 단계별로 공적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4.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및 프로그램(안)

- ‘통일전문인력 양성’은 “일정한 교육 과정을 통해 통일대비 전문인력을 길러내는 과정”이라고 지칭해 볼 수 있음
- 일반 국민 대상의 통일교육과정은 ‘통일교육’으로, 통일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통일전문인력 양성’으로 구분하여 명명

[그림 II-1] 통일교육과 통일전문인력 양성과의 관계



*출처: 박영정, “통일전문인력 양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통일부, 2016).

- ‘통일전문인력 양성’도 광의의 ‘통일교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통일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분 필요

- 통일전문인력의 양성은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통일전문인력이란 개념 속에서 재구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통일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통일국가 초기(3년 내)의 제도통합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 통일과정에서 전문인력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기
- 둘째, 통일준비 단계에서 남북교류협력은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남북교류협력 전문인력 양성도 현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
- 셋째, 통일 쏠과정에서 중요한 토대는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형성. 통일교육이 이뤄지게 할 수 있는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

○ 상기 방향에서 ‘통일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① 통일전담 행정인력 양성, ② 분야별 통일전문인력 양성, ③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④ 대북사업 전문인력 양성의 네가지 프로그램의 추진을 제안³⁾

① “통일업무 전문 행정인력 연수” 프로그램(안)

- 성격: 통일부 및 각 행정기관(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통일전담 행정인력(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연수’ 프로그램
- 방향: 현행 통일교육원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운영하되 각 행정기관과 협업 방식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 사업 예시: △통일교육원 프로그램 지속적 확대, △연수 프로그램 운영,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

3) 박영정, “통일전문인력 양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통일부, 2016년 4월) 참조.

② “분야별 통일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안)

- 성격: 분야별 전문가를 통일전문인력으로 재육성하는 프로그램
- 방향: 정부 부처나 민간 협회 등에서 프로그램 운영(참가자 선발 및 관리 등) 담당. 수요가 있고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시행
- 사업 예시: △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통일교육원, 문체부, 예술단체 협업), △의료분야 전문인력 양성(통일교육원, 복지부, 보건의료단체 협업), △문화유산분야 전문인력 양성(통일교육원, 문화재청 협업) 등

③ “통일교육 전문인력 연수” 프로그램(안)

- 성격: 학교, 대학, 사회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통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 방향: 통일교육원과 교육기관의 협업으로 운영하되, 신규인력 양성은 교육기관에서, 기존인력 재교육은 통일교육원에서 담당
- 사업 예시: △학교통일교육 담당하는 교사 연수, △대학통일교육 담당하는 교수강사 연수, △사회통일교육 담당하는 강사 연수 등

④ “남북교류협력 전문인력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안)

- 성격: 대북사업 현장인력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프로그램
- 방향: 남북교류협력 관련 부처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통일교육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사업 예시

- ‘(가칭)남북개발협력 전문인력 아카데미’ 운영: 남북 민생통로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가칭)남북문화교류 전문인력 아카데미’ 운영: 남북 문화통로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가칭)남북생태협력 전문인력 아카데미’ 운영: 남북 환경통로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5. 결론 및 고려사항

○ AI시대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 이후 한반도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통일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정책적 준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

- 즉, 우리 국민 중 10명 중 7~8명은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함에도 제도통일과 통일 후 사회통합 과정, 그리고 통일에 이르는 구체적 과정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실정

※ 통일인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란 의견은 70% 이상임에도, “어떤 통일을 원하는지”, “통일 비용은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 등 구체적 항목에선 의견이 분분

○ 이에 통일부는 각 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정책 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통일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야 함

- 정책적으로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통일교육원의 기능 확대 재편, 통일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마련 및 확보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

- 아울러 통일전문인력 양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통일교육원이 허브 역할을 수행하되, 다른 교육기관이나 각 분야별 전문가 협회, 대북사업 관련 민간단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
- 따라서 정책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인식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진 정책 수행 및 관리가 필요

- 마지막, 국회 차원에서는 우리의 숙원인 통일은 여야를 뛰어 넘는 민족적 과제인 바, 여야 동수의 관련 특위를 구성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가야 함

Ⅲ.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작성: 조희문 영화평론가 · 前 인하대 교수 (cine6923@naver.com)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한민국 각계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 중에서도 영화업계의 타격이 심각. 영화계는 제작 중단, 개봉 연기, 극장 운영 저조 등으로 업계 조성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 특히, 영화 관객수가 지난해 대비 30% 수준으로 격감한 점은 이번 영화산업 위기의 주요원인이 유통 경색이라는 점을 방증. 그럼에도 정부는 영화업계에 대한 대책 마련은커녕 스스로 생존하라는 식으로 영화업계를 사실상 방치. 이에 다른 위기산업 수준의 지원대책 마련, 특히 영화인, 극장업계 등에 긴급지원 자금 유통에 대한 논의가 필요

1.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영화산업 위기

□ 전 세계 영화업계의 위기

-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요 영화생산국이 제작을 중단하거나 극장 폐쇄 상태에 들어가 있어 사실상 세계 영화업계 시계가 멈춘 상태
 - 영화 제작 및 유통 능력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미국, 프랑스, 중국, 한국, 일본, 인도, 영국 등 10여 개 국가에 지나지 않음
- 문제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데 최소 1~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 현재와 같은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한다면 영화계 기반이 붕괴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국내 영화업계의 위기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제작, 유통, 배급 등 영화계 전반이 위기에 처했으나 그 중에서도 극장의 피해가 두드러짐
- 과거에도 ‘영화산업 위기론’이 제기된 적 있으나, 미디어 간 경쟁 혹은 제작현황 중심으로 논의된 반면, 현재 상황은 유통 경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 조성 이후 초유의 사태임
 - 대표적인 극장 체인 CJ CGV의 2020년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68% 감소¹⁾하였으며 2020년도 국내 전체 영화 관객은 6,500만 명 이하로 줄고, 수익은 70~8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극장업계의 위축은 제작업계까지 연쇄 파급이 이루어져 영화산업 전반의 생존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2. 영화 유통 주요국의 피해 현황

- 영화진흥위원회가 조사한 주요국가들의 영화 유통 현황에 따르면 제작 중단, 극장 폐쇄 등으로 영화업계 종사자의 대량 실업이 발생²⁾
- 미국, 프랑스, 중국 등은 극장 문을 닫거나 제작이 중단된 상태이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30% 내외의 수준으로 격감한 상태임

□ 미국

- 2020년 3월 둘째 주, 북미의 극장 티켓 수입은 2000년 이후 최저인 5천 5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0.3.19. 월트디즈니와 유니버설

1) CJ CGV, 코로나19로 3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68.8% 감소, 매일경제 2020.11.10.
2) 영화진흥위원회 이슈페이퍼, 코로나19 충격: 한국 영화산업 현황과 전망

픽처스는 극장 폐쇄에 따라 당분간 박스오피스 집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함³⁾

- '007 노 타임 투 다이'는 당초 2020년 4월에 개봉하기로 했으나 11월로 개봉이 연기되었고 다시 2021년 4월로 연기하기로 함
- 이 여파로 영화체인 '시네월드'는 미국 내 530여 개, 영국 120개 등 650여개 극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전체 극장 793개, 스크린 수 9,500개의 82%에 해당함
- 시네월드는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에만 16억 달러(1조 8,70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 3대 극장 체인인 AMC, 리갈시네마, 시네마크 등 미국 내 모든 극장이 영업 중단을 발표
- 미국의 영화잡지 할리우드 리포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극장 폐쇄가 석 달간 지속될 경우 미국 내 극장매출이 지난해 114억 달러에서 올해는 68억 달러 혹은 64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져 약 40% 이상의 매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전 세계 매출은 지난해 422억 달러에서 올해는 250억 달러 내지 220억 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함⁴⁾

□ 중국

- 코로나19의 진원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지난 1월부터 전국 극장을 일제히 폐쇄하였으며 완다시네마와 시네마크 등 유수의 극장 체인도 미국의 상황과 유사함

3) Hollywood movie studios suspend release of box office data after coronavirus slump (Jill Serjeant, Reuters, 2020.3.20.)

4) Box Office's Best Case Scenario? Down 40 Percent, Pamela McClintock, Hollywood Reporter, 2020.4.8.

- 광파전시사회조직연합회 산하 영상제작위원회와 배우위원회는 1월 우한 봉쇄령에 따라 제작 중단 통지, 이후 중국 전역의 스튜디오는 일제히 운영 중단, 영화제작이 중단됨

□ 프랑스

- 2020.3.15. 프랑스 정부는 전국의 모든 극장과 식당 그리고 필수 생필품 판매점을 제외한 상점의 영업 금지를 명령함⁵⁾
- 이에 따라 대중이 모이는 극장 및 영화관도 잇달아 폐쇄되었으며 영화제작도 중지됨
- EU 국가 중 영화제작 역량이 있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대부분 국가가 영화 제작을 중단하였으며 극장 폐쇄에 돌입함

3. 국내 영화계 피해 현황

- 국내 영화계는 섣다운 상태로 가지는 않았지만, 제작이 중단되거나 개봉 연기, 일부 극장 휴관 등 제작사나 극장은 사실상 휴업상태나 다름없음
- 2019년 관객은 226,678,777명에 반해 2020년 관객은 65,000,000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전년도에 비해 28% 수준으로 격감
- 매출액 기준으로는 2019년 약 1조 9천억 원, 2020년 약 4,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수준으로 연말까지 30%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5) 영화진흥위원회 이슈페이퍼, 코로나19에 따른 프랑스 대응 현황

- 극장업계 2020년 1분기 매출은 지난해 4,678억 원에서 같은 분기 대비 2,467억 원이 감소한 2,211억 원이며, 극장 3사가 발표한 적자 규모는 2월에 240억 원, 3월에는 810억 원에 달함⁶⁾

4. 해외 지원 현황

□ 미국⁷⁾

- 연방정부는 2020년 3월, 대다수 납세자들에 대한 현금 지급을 포함한 총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CARES Act)을 발의함⁸⁾⁹⁾
 - 실업수당의 경우 최장 4개월 동안 실업보험 또는 팬데믹 실업지원을 받는 실직자에게 주정부 지급 수당 외에 연방정부 수당을 주 600달러씩 추가 지불함
 - 할리우드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일시해고자로 주정부 수당(40~450달러)를 26주간 수령하는데 이 법안으로 인해 연방수당 600달러를 추가로 받고 실업수당 지급 기간도 39주로 늘어나게 됨
- 국립예술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과 국립인문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 공공방송공사(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 등에 예술기금

6) 멀티플렉스 극장 1분기 매출 2500억 사라져... 해외 지점도 줄줄이 문닫아(매일경제, 2020.3.28.)

7) 영화진흥위원회 이슈페이퍼-코로나19에 따른 미국 영화산업의 정책적 대응 현황

8) 코로나19 관련 미국 경제동향 및 경기부양책, 국회사무처

9) 개인에게는 1회성 현금지급 2900억 달러 투입 △실업급여 확대·연장 2,600억 달러 △중소기업 대출 및 보조금 제공 3,770억달러 △대기업과 주·시 등 지역 정부에 대한 대출 및 대출보증 5,040억 달러 △주·지방 정부에 대한 원조 1,750억 달러 △보건 관련 지출 증액 1,800억 달러 이상 △사회 안전망 지원 420억 달러 △재해지원금 증액 450억 달러 △교육 부문 지출 증액 320억 달러 이상 △개인세금 감면 최소 100억 달러 △급여세액공제 등 기업 세금 감면 최대 2,800억 달러 △기타 지출 350억 달러 등

확대 투입으로 각각 7500만 달러를 받게 되고 긴급운영자금 형태로 각종 프로젝트 등에 지원함

○ 극장주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Owners, NATO)

- 파이오니어스 어시스턴스 펀드(Pioneers Assistance Fund, PAF)와 함께 극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영화관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40만 달러의 코로나19 긴급 기금을 조성

○ 극장무대종사자연합(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 IATSE)

- 내셔널 베네피트 펀드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연금 조기 수령 시 수수료 면제 등을 시행 중

○ 감독조합재단(Directors Guild Foundation, DGF)

- 재정적 위기에 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2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긴급구호기금을 창설, 제작 중단으로 실직 상태가 된 미국감독조합 회원들에게 각 1,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장기 무이자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배우조합(Screen Actors Guild - 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Radio Artists, SAG-AFTRA)

- 제작 중단으로 타격을 받은 16만 회원들을 위해 회비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프로그램 실시, 연체료 면제와 회원 자격 유지 등의 구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4월부터 3개월 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50% 잠정 삭감(450~855달러 혜택)하기로 결정함

□ 프랑스¹⁰⁾

- 프랑스 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가 불가피한 고용주에 대해 세전 월급의 70% 혹은 세후 84%, 시간당 최소 8.03유로를 보장해주는 지원책 발표함(2020.3.25.)
- 재무부의 조치를 보완하고 문화산업에 특화된 지원책을 추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화 및 문화산업 영역에 대한 IFCIC(L'Institut pour le financement du cinéma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 영화 및 문화산업 금융 연구소의 조치도 발표됨
 - 상황에 따라 모든 유형의 은행 대출에 대해 최대 70% 보증, 은행의 신용 보증을 체계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재개를 장려하며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자체 대출로 공제 가능한 자본 상환금의 설립을 수락
 - 이러한 조치는 재무부가 이미 시행한 조치에 대한 추가 조치로 특히 재정 기한 지불 마감일 연장도 포함하며,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적인 조사를 통해 직접 세금 환급 요청
- CNC의 비상조치(les mesures d'urgence)
 - CNC(Center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국립 영화센터에서는 영화 및 시청각 산업의 창작자와 회사, 대중을 위한 비상조치 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작가 비상기금(fond d'urgence)
 - SACD(Société des auteurs et compositeurs dramatiques) 극작가

10) 영화진흥위원회 이슈페이퍼-코로나19에 따른 프랑스 대응 현황

및 창작자 협회에서 설립한 비상 기금으로 50% 이상의 창작활동이 감소한 시청각, 영화, 애니메이션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CNC가 재정을 지원함

- 정부의 연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직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혹은 자영업자 중 2019년 3월 한 달 소득에 비해 2020년 3월의 활동이 70% 감소하거나, 2019년 4월 한 달 소득에 비해 2020년 4월 활동이 50% 감소한 경우임
- SACD는 위의 정부 연대기금의 지원조건 증명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매달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작가군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사각지대의 창작자들을 보호하고자 함
- 1,500유로의 정액보조금을 지급, 지원 예산은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 CNC에서 지급함

□ 중국¹¹⁾

- 국가전영국은 입장료에 부과되는 ‘영화사업발전전용자금(한국의 영화발전기금과 유사) 감면
- 중국배급상영협회와 중국영화제작자협회는 모든 회원사에 대해 2020년 회비면제

11)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사태 아래 중국 영화계 현황과 당국 대응

5. 국내 지원 현황

- 정부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으나, 영화 분야는 제외되었으며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¹²⁾에서도 영화 분야는 제외됨¹³⁾
-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을 90%까지 감면하도록 하며 영화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주선했
 - 2020년 기존 예산(889억 원) 외에 영화발전기금 170억 원을 추가 편성해 한국 영화 제작, 개봉 활성화 특별지원, 현장 영화인 특별 직업훈련 지원, 중소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 영화 관람 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로 특별 지원하기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확진자가 나온 극장에 대해 방역비 지원, 일부 극장에 대해 방역 물품 지원하고 영화발전기금에 대해 11월까지 체납을 면제해 분할이나 지연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는 입장료의 3%인 영화발전기금을 0.3%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함
- 그러나 정부 각 부처 및 영화 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책이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영화계는 자체적으로 생존을 도모하든지 사멸하든지 자율에 맡긴 상태임

12)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에게 연 1.5% 금리로 7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긴급대책

13) 금융위원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6. 위기 극복을 위한 업계 건의사항

- 당 차원에서 관계부처(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등) 및 업계관계자들과 긴밀히 접촉하여, 영화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함
 -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제작 중단 및 개봉연기 등으로 비정규직이 다수인 영화인들은 생존위기에 직면한 바 영화업계에 대한 긴급재난 구호기금 지원 검토
 - 둘째, 현재 영화산업 피해 현황을 반영하여 여타 특별관심업종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대책 마련
 - 특히, 관객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장업계에 대한 긴급지원 자금 유통 및 정부지원 사업장 지정 등이 시급
 - 영화제작 기반에서 극장유통도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
 - 셋째, 영화 배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영화제작사와 극장업계 관련자들이 협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설치가 필요

이슈브리프 목록 (최근 발간순, 2019.3.14.~現在)

이슈브리프 2020-15 (발간일: 2020.12.10)

- ▶ 서울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 니즈와 시사점 ▶ 주거권보장 중심의 주거정책 추진 필요성과 과제

이슈브리프 2020-14 (발간일: 2020.11.28)

- ▶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 ▶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이슈브리프 2020-13 (발간일: 2020.11.12)

- ▶ 2020 美 대선 결과분석: 평가, 전망, 대응 ▶ 공시가 현실화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
- ▶ 임대차2법發 전월세대란: 최근 동향과 정책과제

이슈브리프 2020-12 (발간일: 2020.10.29)

- ▶ 노동시장 관련 최근 논점과 개혁방향 ▶ 정당성을 상실한 文정부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
- ▶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관광업계 피해 현황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11 (발간일: 2020.10.15)

- ▶ 실효성 중심의 재정준칙과 재정감독원 도입 제안 ▶ 북한 암호화폐 절취 실태와 정부 대응의 문제점
- ▶ 부동산 과세강화의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 ▶ 초고령사회 대비 주택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방안

이슈브리프 2020-10 (발간일: 2020.9.28)

- ▶ 전월세전환율 2.5% 강제인하의 타당성 검토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유통정책 제언
- ▶ 포털 SI알고리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2020-09 (발간일: 2020.9.17)

- ▶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와 정책방향 ▶ 코로나19, 중소기업 생존·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 ▶ 코로나19, 국내외 육아보육 정책 검토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8 (발간일: 2020.8.13)

- ▶ 최저임금 수준, 중위임금 60%로 제도화 ▶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일가정양립정책' 방향
- ▶ 아동학대범죄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

이슈브리프 2020-07 (발간일: 2020.7.23)

-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 2020 美 대선 판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 ▶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인 피해 현황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6 (발간일: 2020.6.25)

- ▶ 약화로 국가재정,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 ▶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현안과 과제
- ▶ '남북 공동선언' 재점검과 과제: '6·15선언'을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2020-05 (발간일: 2020.5.28)

- ▶ '전국민 고용보험제' 우파적 대안 모색 시급 ▶ '김정은 신변이상설': 대응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 ▶ 영국 보수당의 장수 비결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4 (발간일: 2020.4.2)

- ▶ 역대 총선에서의 사전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시사점 ▶ 文정권 정책평가와 국정지지도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
- ▶ 'n번방' 사태: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해외사례 검토 ▶ 신종 코로나 충격의 고용감소 추정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3 (발간일: 2020.3.12)

- ▶ 신종코로나의 경제쇼크, 정부대응과 시사점 ▶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북한: “바로 보기”
- ▶ 포털의 댓글과 실시간검색어 폐지: 의미와 과제

이슈브리프 2020-02 (발간일: 2020.2.13)

- ▶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만' Top 10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방향
- ▶ 대한민국 2040년: 정치인재 양성과 한국당의 과제

이슈브리프 2020-01 (발간일: 2020.1.16)

- ▶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 최근 美-이란간 충돌 관련: 현황, 파장, 전망
- ▶ 2030 사로잡은 美·日 청년보수정치 사례분석 ▶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2019-11 (발간일: 2019.12.19)

- ▶ '초슈퍼' 예산과 '초미니' 재정승수 ▶ 2019 핑수 열풍의 사회적 의미와 교훈
-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의 쟁점과 대응방향

이슈브리프 2019-10 (발간일: 2019.11.21)

- ▶ 탈북자 강제복송: 흔들린 원칙, 상처받은 국격(國格)
- ▶ 공유모빌리티 '타다' 관련 쟁점 및 시사점 검토 ▶ 위험적이며 정치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이슈브리프 2019-09 (발간일: 2019.10.31)

- ▶ 공수처,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改惡)' ▶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 ▶ 점증하는 장기 복합불황 공포

이슈브리프 2019-08 (발간일: 2019.10.10)

- ▶ 文정부 '역대 최고 고용률'의 실상과 대책 ▶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의도, 평가, 전망
- ▶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성

이슈브리프 2019-07 (발간일: 2019.9.19)

- ▶ 미국發 '한-일 핵무장론' 대두: 쟁점과 대책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 ▶ 국민연금 재정위험과 개편방안

이슈브리프 2019-06 (발간일: 2019.8.29)

-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배경, 의도, 파장 ▶ '강대강' 대응으로 일본 수출규제 고착화 우려
- ▶ 확대되는 1인 가구와 보수주의 가족가치

이슈브리프 2019-05 (발간일: 2019.3.14)

- ▶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 유튜브 '슈퍼챗' 논란, 정치자금법의 한계와 시사점
- ▶ (현안보고) 베트남 미북회담 '노딜': 원인, 평가, 전망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